

■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2018. 6. 7.)

2018 서울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교육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 ▲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018년 6월 7일 11시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으며, 6월 1일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응답을 망라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임.
- ▲ 평가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영유아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인권 사교육 대책 등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함.
- ▲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음.
- ▲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은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 조영달 후보의 경우,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고교입시 추첨제, 수업과 평가 혁신 관련된 공약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에서 공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 조희연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등에서 공약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고교입시 개선 영역의 공약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과 분석을 한 결과, 미흡한 공약이 다수 발견되었고 관련 공약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음.
- ▲ 공약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후보들이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드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견인하고자 함.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 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영달, 조희연 두 후보는 답변서 제출 및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박선영 후보의 경우 답변서 및 토론회에 불참하여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대분류	영역	세부 내용
영유아 고통 해소	1.영유아 고통 해소	영유아 인권법 제정, 한글과 영어 조기교육의 인한 과도한 학습 실태, 영유아 영어학원 문제,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
비교육적 관행해소	2.줄 세우기 관행 해결	성적순 줄 세우기와 관련된 각종 차별(성적순 도서 실/급식/기숙사 시설 등 차등 기회 부여), 학원 업자들 초청 설명회, 입시 실적 현수막 등
책임지는 교육/인권	3.수업과 평가 혁신	수업 방법의 혁신 전략, 평가방식(논서술식, 과정평가 등) 개혁, 교사별 평가, 영어교육내실화, 수포자 해결 등
	4.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진로진학 지도,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 특성화고 운영과 선취업 후진학 정책,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학교 운동부 정책
	5.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학교별/학생별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

		육 불평등 실태, 저소득층 지원 정책, 돌봄 교실 정책, 방과후 교실 운영 실태, 기초 학력 책임, 학습부진아 실태와 해결방안 등
	6.학생 안전과 인권	학교폭력 대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학생인권상황 및 상벌집제와 학생자치법정, 중도탈락학생 실태
사교육	7.사교육대책	선행교육 실태와 선행교육규제법의 학교 적용 과정의 허점, 학원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학원의 문제 실태 등
좋은 교육위한 학교구조 및 교원정책	8.교원 전문성 책무성 향상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교장공모제, 교원에 대한 각종평가(근무평정,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평가 등), 교권 실태와 교권보호 정책
	9.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관련 정책, 학교평가정책,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평가,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 정책
	10.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와 고교 입시 정책 개선, 일반고 위기 상황 해소, 수평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
교육환경/행정 개선	11.교육환경개선	학교 시설(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 관련 정책, 학급당 인원수 축소 등
	12.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약화,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 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및 찬조금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평가 기준

평가기준	세부 사항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현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 주체들의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 우리 교육이 나아갈 교육 본질에 합당한 정책인가?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 정책공약이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가? - 제시한 목표가 단계별로 구조화되어 있는가?
실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들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 내어 놓은 정책들이 적절한 필요에 근거하고 있는가? -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공약인가?

■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공약 영역들	조영달	조희연	박선영
영유아 고통 해소	보통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줄세우기 교육 관행 해결	적절한 공약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 [해당 공약 없음]
수업과 평가 혁신	적절한 공약이다	적절한 공약이다	-[해당 공약 없음]
진로 및 특수교육	미흡한 공약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책임교육과 교육 기회균등	적절한 공약이다	적절한 공약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학생인권과 안전	보통이다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사교육 대책	보통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미흡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참여와 소통의 학교구조	보통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다양하고 평등한 고교체제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교육환경 개선	보통이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 후보별 평가 1 :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외교 자사고 입시 고교입시 추첨제도 입,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등**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교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라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조영달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영달 후보 공약 평가 결과>

영역	주요 공약	분석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총평
1. 영유아 고통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근무 환경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 시스템 구축 ● 영유아 시기의 영어교육 및 학습 전면 금지하는 법 제정 ●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집중단속 ● 교습비 규제 뿐 아니라 학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영어교육 전면 규제 ●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특기·적성 교육으로 유도 ● 유치원 정규 시간 이후 놀이 중심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 되도록 유치원 교육 환경 전환 ● 영유아 인권법 제정 동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문제의식 대비 공약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해보임. 고액 영어학원을 집중 단속하고(어린이집 포함) 영유아 시기의 영어교육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면서도 놀이 중심의 영어 노출을 허용하겠다는 후보자의 견해는 기준이 모호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자칫 문서로 제시한 공약이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될 수 있어서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현행 맞춤형 보육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근무환경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 시스템'을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모델과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보통이다
<p>● 총평 설명: 영유아 단계의 과도한 학습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놀이 중심의 전환을 강조함. 다만 공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함</p>			
2. 줄세우기 관행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 세우기 학교관행: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 드림캠퍼스 추진 ● 교육청의 시스템 개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 학교의 사교육기관화: 교육청에서 진로 및 진학 전문가 풀을 충분히 확보. 대학입학전형 담당자와 고등학교의 교류를 추진.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상담가로 활용 ● 평등한 학교: 자습실 사용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되 추첨을 통해서 결정. 교내 경시대회를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 세우기 학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제안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잘 제시함. ● 학교의 사교육 기관화를 막고, 진로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데서 교육적 타당성 높음. ● 다만 교내 경시대회를 다양화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학교 교육 정상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경시대회 자체를 억제해야함에도, 이를 용인하며 다양화한다는 관점을 갖는 것은 현재 줄세우기 학생 고통 문제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적절한 공약이다

	화하고 개인의 최대 참가 횟수를 제한.	판단함.	
	● 총평 설명 : 줄 세우기 학교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인식이 타당하고, 해결 방안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갖고 있음.		
3.수업과 평가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공동구성 수업을 기반으로 한 수업 혁신 ● 내신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지시, 논서술형 평가 확대 ● 초등은 기록 중심의 평가로, 중학교는 논서술형 평가로, 고등학교도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성공 ● 중학교 학생들의 체력, 학력, 인성과 시민성, 적성과 진로탐구 등의 역량을 종합한 '기초역량보장제'를 실시하고 학교에 전문교사 파견 대입 수시.정시 비율 현행 유지, 수능 절대평가 과목 단계적 확대 ● 서울형 고교학점제 '드림캠퍼스'를 추진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이웃 학교, 대학, 기업,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다양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공동구성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성, 협력, 성찰 등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가는 원리로서 21세기 미래형 학습으로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신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 등 평가체제와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음. ● 교사의 수업 역량 신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보완이 필요함. ● 드림캠퍼스 공약의 경우,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기초역량보장제를 통해 체력과 학력, 인성과 시민성, 적성과 진로탐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역량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적절한 공약이다
	● 총평 설명 : 지식공동수업과 진로교육 중심의 드림캠퍼스 공약은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평가체제와의 정합성도 갖고 있음.		
4.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캠퍼스 제도를 활용한 진로 교육 강화 ●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기업에서 근무하면 대학입시에서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일반고에 직업반을 확대해서 직업교육을 강화함. 일반고 직업반은 특성화고와 교류를 통해서 특성화고의 인프라를 활용함. ●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은 의무화하기 보다는 준비된 기업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캠퍼스제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안은 부족함. ●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어떻게 교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 침체되고 있는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지 못함.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특수학교 신설 확대 요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없고,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미흡한 공약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평생교육시설로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방안이 없어, 향후 특수학교 확대 기대 근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 현재 침체기에 접어든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특수학교 설립도 확대의 어려움에 비해 구체적인 대안이 갖고 있지 못함. 		
5.책임 교 육 과 육 기 회 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고른교육 안전망' 강화 ● 학습 장애 및 학습부진의 조기 발견시스템 구축과 초등 저학년 우선 도입 및 치료 지원 ● 중학교 학생들의 체력, 학력, 인성과 시민성, 적성과 진로탐구 등의 역량을 종합한 '기초역량보장제'를 실시하고 학교에 전문교사 파견 인공지능 학습도우미 '에듀내비'를 통해 학습수준과 패턴에 맞는 학습 방법 및 정보 안내 ● '서울학습도움센터' 권역별 확대 및 학습상담사 확대 배치 ●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해 '함께하는 교사제' 운영 ● 장애, 소득격차, 다문화의 특성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서울교육불평등지수'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수립 추진 ●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축 : 0교시 돌봄교실과 모든 초등학생의 3시 하교를 추진, 이후 방과후 학교나 돌봄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 ● 돌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시간제로 운영되는 돌봄강사 직종을 무기직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장애 조기발견시스템 초등 저학년 우선 도입은 타당성 높고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고른교육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를 지원하는 추적관리시스템 도입을 명시한 것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정책. ● 기초역량보장제를 통해 통한 학습부진 문제 해결 접근은 타당하지만, 중학교에서 체력과 학력, 인성과 시민성, 적성과 진로탐구 등의 역량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임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보완이 필요함. ● 서울교육불평등 지수 개발이 교육기회 균등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에듀내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부족 ●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축의 타당성이 높음. ● 돌봄강사 무기직 전환 입장을 밝힌 것이 돌봄교실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적절한 공약이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 초등학교 저학년에 우선적으로 학습장애 조기진단시스템과 치료적 접근 정책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과 고른교육안전망 정책을 통한 취약계층 자녀 추적관리시스템 운영방안은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임. 		
6.학생 안 전 과 인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 위한 지원 체계 '1학교 1번호사제' 추진 ● 의무교육기간 내 무상의료 제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문화 구축', '성감수성 높여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 등과 같이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보통이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 시간, 쉬는 시간 활용 안전 관련 불시 훈련과 VR, AR 활용한 안전체험교육 강화 ● 성감수성 높여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 ● 단위학교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통해 종결할 수 있는 권한 확대 ●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옮겨 전문성 높여 ● 특별교육 외에 정규 수업 내 성평등교육과 성폭력 예방 위한 토론, 탐구활동 추진 ● 학교 내 성폭력은폐구조 해체, 교사-교사, 학생-학생, 학생-교사 간 경계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학교 권한을 확대하면서 학폭위를 교육 지원청으로 이관해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밝혀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됨. 다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자칫 현장에서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구체적 보완 필요. ● VR, AR 활용한 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하고 불시의 안전 교육을 반복하겠다는 정책 방향 긍정적임. ● 학생 자치 등에 관한 구체적 문제의식과 대안을 찾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학교 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후보자의 문제의식이 높은 수준임. 다만 공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p>7.사교육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교육 규제법 관련: 학교 내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감독. 다만,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권한 존중. ● 학원 불법적 운영 대책: '서울시 학원 정보 공시제'를 실질적으로 운영. '서울입시공정성 학부모 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사교육 피해, 가짜 정보, 대학편의주의 신고를 받아 처리할 것. ● 사교육 감소 방안: 인공지능 '에듀내비' 등을 통한 학습 도움 체제 구축. '서울학습도움센터' 확대 및 '함께하는 교사제' 운영. 중학생 입시 폐지. 드림캠퍼스 운영 ● 학원휴일휴무제&학원교습시간: '학원휴일휴무제'와 '초중고 학교급별 학원심야교습 차등 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 파악과 적극적인 학부모 보호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타당함. 추진에서도 기존 학원 단속 수준이 아니라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데 의지를 보임. 사교육 감소 방안에 있어, 중학생 입시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학습 도움 체제에 적극적인 방안은 타당함. 다만 예산에 있어 불확실한 면이 있음. '학원휴일휴무제'와 '초중고 학교급별 학원심야교습 차등 금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공감만 보였을 뿐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음. 	<p>보통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 학원 불법적 운영 대책에 대한 문제 인식이 타당하고, 그 개선 		

	방안도 구체성을 가짐. 반면 학원휴일휴무제와 학교급별 학원심야교습 차등 금지에 관련해서는 구체성 보완 필요.		
8.교원 의 전 문 성 과 책 무 성 향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승진 제도: 교사 경험을 지닌 '현장교육 부교육감'을 신설함. 1차 선발을 할 때 자체 필기시험이 아닌 임용고사를 통해 위탁 선발을 한 사학에게 인센티브 부여). '교원연구년제'를 연 800명 수준까지 확대 ●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장공모제의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인정. 공모제와 함께 투(two)트랙의 제도가 필요. 교장 자격과정을 각 대학의 연수원 등에서 개방적으로 개설. 단위학교의 필요수요에 따라 공모제 여부와 유형은 달라질 수 있음. ●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함. 교원종합능력개발(역량요소와 장기지표 포함) 평가제도를 구축함. ● 교권침해 관련: 교권의 보호와 실질적 교육활동 침해 구제를 위해 '1학교 1변호사제'를 확립함.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의 상응 조치를 실질적으로 의무화함. 서울 시교육청 내에 위치한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 및 확대 개편. 교육청 내 교권 보호 전담·전문인력을 확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교육 부교육감 신설은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긍정적이나, 관련 조례 개정이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사학에 대해서도 임용고사를 통한 위탁 선발 유도 정책이 공정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교장공모제에 대해 일반학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공모제가 필요하다고 해 현행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산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였고 나아가 공모제 교장 자격 과정을 대학 연수원 등에서 관리하게 함으로 실제로 이런 공식적 행정적 교육과정 참여를 기피하는 교장 실질 능력 교원들이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 교원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종합능력 개발 평가제도도 타당한 방안임. 다만 기존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교권 침해 관련해서도 학교장의 상응 조치를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거나 1학교 변호사제도 의미 있는 개선 방안으로 판단됨. 다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변호사제를 활용한다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미흡한 공약이다
9.참여 와 소 통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추가 지정 중단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해 혁신학교의 성과를 검증 ● 학부모회 임원의 학교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엇보임.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보통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서는 확대의지가 약하고, 공모제 교장 선발 교육과정 운영방식 또한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음. 교권침해 관련해서는 문제 인식과 방안의 구체성이 높으나 실현가능성이 보완될 필요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위 한 학 교 구 조 개혁</p>	<p>회 당연직 위촉 또는 발언권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회의 과정 공개와 중계방안 고려 ● 학교운영위원 연수 강화 ● 교육지원청 수준의 학부모회장 간담회 정례화 ● 학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권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학부모 권리 장전' 제정 	<p>비판이 있어야하는데 기준점이 모호하거나 관점과 관점 간의 일관성이 부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역량보장제의 역량관과 혁신학교의 학력관이 일정 부분 공통분모를 갖고 있음에도 혁신학교 성과 검증을 이유로 추가 지정 중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혁신 흐름을 중단시킬 우려가 있음. ●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등 조치를 제안한 것은 학부모회의 비중을 강조한 것으로 의미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 혁신학교 성과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새로운 혁신학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혁신학교의 학력관과 기초역량 보장제에서 말하는 역량 사이의 공통분모를 고려할 때, 혁신학교 추가 지정 중단 공약이 자칫 학교 혁신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 비전을 갖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10. 다양 과 평 성 확 하 고 체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와 자사고 대책: 교육의 본래적 가치의 추구하고 다양성의 차원에서 현 외교와 자사고는 존속함. ● 고입전형 개선: 외교·자사고는 신입생의 선발 방법을 학교와 학부모의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함.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함. ● 과학고와 영재고 대책: 과학고와 영재고는 고등학교에서 위탁받아 교육하는 방식을 정부와 상의함. ● 일반고 개선방안: 진로중심 고교과정 '드림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와 자사고 개선에 있어 체제를 존속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4차 산업, 외국어 통/번역 인공지능 시대에 외국어고 존치는 미래시대 흐름과 맞지 않고, 이질적인 집단과의 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미래역량의 관점에서 동질집단간의 폐쇄적 학교체제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함. ● 하지만, 기존 체제 속에서 입학전형으로 추첨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은 매우 타당함. 어차피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입시제도 변화에 있다면 이 부분에서 혁신적 입장을 취한 것은 매우 의미 있음. 또한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도 인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함. ●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위탁교육형식으로 바꾸는 정책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방안으로 보임. 다만 매우 어려운 과제라 실현가능성에서 충분히 설득되지 않음. 일반고 	<p style="text-align: center;">적절한 공약이 다</p>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 측면에서 드림캠퍼스 방안도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 고교체제는 대체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점이 문제점이나, 고입전형 방식에서 추첨을 전격 도입하고, 과학고와 영재학교 체제를 위탁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타당성과 구체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11.교육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방향의 정책 ● 학급당 학생 수의 평균치를 낮추는 것 보다 '학생 수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판단됨. ● 학교급식 부정비리 업체 적발 즉시 퇴출 및 해당 학교 강력한 징계 ● 노후건물 및 시설 보수 예산 확대 편성하여 미세먼지 관리, 석면교실 점검 강화 ●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인상,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등을 강력히 요구함. ● 인공지능 '에듀네비' 등을 통한 학습 도움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의 양극화 문제지적은 구체적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없음. ● 토론회 답변도 '드림 캠퍼스'가 시행되면 해결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여 실현가능성 낮음. ● 에듀네비가 기존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지원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예산확보 방안 등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미흡함. ● 에듀네비는 핵심공약이나 서울교육 현황의 우선순위에서 핵심이어야 하는지에는 타당성이 미흡함. 	보통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문제의식은 구체적이나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선언적임. 에듀네비는 서울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에서 핵심이어야 하는지 타당성과 예산 대비 효과성이 부족 		
12.교육 행정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교육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는 '현장교육 부교육감' 신설 ● 학교 조직을 행정 업무 중심에서 교육중심체제(학년, 교과, 과정 중심)으로 전환 ● 학교업무의 교육중심 정상화 추진 ● 교사 수업시수 법제화 및 교육외 과도한 행정 업무 금지 법제화 제안(교원지위법 포함) ● 자율적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교원의 "학교경영전문학습공동체" 활성화, 단위학교 자율적학교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 자치 영역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자치 지원조직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교육 부교육감 신설을 통해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제시되지 않음. ● 교육중심 학교조직 전환, 학교업무의 교육중심 정상화와 같은 방향성 설정은 타당한 접근. ● 교사 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육외 과도한 행정 업무 금지 법제화는 현장에서 환영할만한 정책임. 자율적 학교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학교경영전문학습공동체"활성화, 단위학교 자율적 학교평가체제 구축은 학교 자치의 핵심 영역으로 매우 타당성이 높은 정책임. 다만, 기존 서울교육정책에서도 지속적인 	보통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전문직에 대한 외부 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실시 및 연수 강화, 교육전문직 특별채용 지양 정책 총량제, 초과량 폐기제, 불합리한 공문서 신고제 등을 통한 현장 행정업무 감축 ● 시민감사관제 확대와 공익제보센터 운영, 시설공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사전계약 예고제' 실시 강화 사학의 공공성 및 학원의 관리감독 강화, 분쟁 학교의 경우 '긴급직권 조정제도' 도입 	<p>로 추진되어온 정책으로 과거 추진 과정에 대한 진단과 성과분석 등을 통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관제 확대, 공익제보센터 운영, 시설 공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사전계약 예고제' 실시 등을 통한 서울교육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지가 엿보임. ●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한 의지와 정책 제시도 의미 있음. 	
<p>● 총평 설명 : 교육중심의 학교업무 정상화, 수업 외 교사행정업무 감축, 정책총량제와 초과량 폐기제 등을 통한 교육청 사업 축소 등 행정 관료주의 해소를 위한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학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어 보이나, 교육청 전문직 선발방식 개혁, 일반행정직 업무 관행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없음.</p>		

■ 후보별 평가 2 :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하여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 줄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부패 척결 관련 공약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희연 후보 공약 평가 결과>

영역	주요 공약	분석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총평
1.영유아 고통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유치원 단계적 신·증설 및 과밀학급 개선, 공영형 사립 유치원 확대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 놀이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지원, 교육과정 내 특성화프로그램 실시 금지 ● 국공립 유치원 확장과 여건개선, 사교육억제 정책을 통해 조기교육에 대한 부담 줄이고 아이들의 놀 권리 확보 ● 영유아 인권법 제정 고려(놀 권리 뿐 아니라,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잘 담기도록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며, 학급당 유아수가 높은 과밀학급을 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성 구체성이 보임. ● 현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공약 및 서울시 교육청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성과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 높아 보임. ● 영유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영어교육 문 	보통이다

		제 해결과, 사교육 억제 정책을 통해 조기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답변은 구체성이 부족함.	
	● 총평 설명: 후보자의 보육 관련 문제의식 및 공약 실현가능성 긍정적이거나, 영어 교육을 포함한 영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및 대안 부족		
2. 줄 세우기 관행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 세우기 학교관행: '안성맞춤 교육과정'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자유학기제 지원시스템과 네트워크,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진로 체험과 온라인정보시스템 등을 제공. 개방형-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 과정을 정착 ● 교육청의 시스템 개선: 개선토록 지도를 했음. 재선하게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도 ● 학교의 사교육 기관화: 학교가 과도한 사교육 업체와의 연계성을 갖고 입시지도를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 대학서열문제, 입시제도의 문제 등의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와 협력 ● 평등한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첫 학년 기초학력을 다지는 교과별 학습보정 제도. 학습지원전문교사 배치와 학습지원부서를 설치.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을 더 적극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 방안으로 교육과정 개선만을 언급하여 문제 인식이 부족함이 확인됨. 학교 내 줄세우기의 차별적 관행 문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불쾌한 일이고 바로잡아야할 요소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보이지 않고 막연한 정책만 제시. ●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도 원칙적으로만 찬성하고 추진 의지는 보이지 않음. ● 교육청의 시스템 개선에서도 특별한 방안 없이 지도와 계도에 머무름. ● 학교의 사교육 기관화 문제에서도 원론적인 문제 인식에만 머물러 특별한 해결 의지나 방안이 보이지 않음. 평등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교육과정에만 치중하여 다른 잘못된 관행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 없음. 	미흡한 공약이다
	● 총평 설명 : 줄 세우기 학교 관행에 대한 문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교육과정적 해결로만 이에 접근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다른 불공정 관행에 대한 문제 인식도 보이지 않고, 교육청의 시스템 개선, 학교의 사교육 기관화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미흡함.		
3.수업과 평가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만들기', '학생이 설계하는 협력수업 만들기',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수업 발표회 확산'과 같은 수업 혁신 전략 제시 ●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 나눔 문화 확산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중학생 중심으로 시행된 협력종합예술활동(연극, 영화, 뮤지컬)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만들기', '학생이 설계하는 협력수업 만들기',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수업 발표회 확산', '협력종합예술활동'의 확대, '교원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은 미래형 수업으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 ● 학생참여중심 수업 활성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를 통한 고교 	적절한 공약이다

	<p>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중심 평가, 교사의 평가 자율권 확보, 내신 절대평가와 논서술형 평가 지향 ●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고교학점제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화 지지. 단, 학부모들의 불안 해결 필요 	<p>학점제 확대 방안의 방향성은 타당성이 높음.</p>	
<p>4.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 학생 참여중심 수업 활성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를 통한 고교학점제 확대,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교원학습공동체 기반의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등 타당하고 구체적인 수업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질 좋은 취업처 발굴, 선취업 후 진학 정책을 더 강화 ● '고졸성공시대'를 위한 특성화고 지원 강화: 미래직업을 대비하여 단계적 학과 개편 및 내실화, 현장실습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실습 시스템 마련. 특성화고 해외취업 연수 지원 및 그를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 등 추진 ● 선택권 보장 통한 현장실습생 조기 복귀 지원, 심리치유, 복귀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장 실태조사와 학생 설문조사, 노동인권 교육 강화, 실습업체 점검. 현장실습의 안전 위해 서울고용노동청과의 협력 강화 ● 특수학교 미설립 7개 자치구 내 공립 특수학교 신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체되고 있는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지 못함. ● 안전문제로 인해 현장 실습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해지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은 임금이 낮아 학생들의 지원도 약화될 우려가 있어 교육적으로 필요한 현장실습이 실제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함. ● 강서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설립 7개 자치구 내 공립 특수학교 신설 확대 공약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에 의문 발생. 	<p>미흡한 공약이다</p>
<p>5.책임 교육과 교육기회 균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첫 학년 기초학력을 다지는 교과 학습보정 제도 운영 ● 학습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전문교사 단계적 배치와 학습지원부서 설치 ●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서울 학습도움센터' 확대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 3,4학년 기초영어 교육 대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학습지원전문교사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여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 ● 서울학습도움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학교 현장과 학습도움센터의 연계성을 강화함. ●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교육금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 	<p>적절한 공약이다</p>

	<p>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특성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교실 운영, 방과 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 돌봄교실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돌봄교실 추가 구축 지원 및 기존 시설 보수, 노후 돌봄 시설 개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스템 활용 및 교내 안전 인력 적극 활용) ● 돌봄전담사 연수 실시를 확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수당 확대 지급 	<p>소하기 위한 초등 3,4학년 기초영어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기초학력지원시스템이 갖고 있는 진단-보정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향후 필요함. ● 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향후 책임 및 관리 주체 확립을 통한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돌봄교실 확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p>● 총평 설명 :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전문교사 배치 방안이 제시되었고, 학습도움센터를 25개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 초등 3,4학년의 기초영어 교육 강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p>		
<p>6.학생 안 전 과 인 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언어문화 개선, 사이버 폭력 예방, '어깨동무', '어울림' 정책 실시 ● 성폭력 신고 접수 및 처리 위한 One-stop 시스템 운영함 ● 학폭 처리절차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맡기는 제도적 개선 추진 ● 학폭 사안 발생 후 갈등조정 기간 마련(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처리) ● 학폭위 내 변호사 등 전문가 비율 확대, 학부모위원 축소 ● 관계형성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 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설치, 단위학교 교권존중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 학생인권센터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센터 '공감' 운영, 교권 법률지원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센터와 교권보호 지원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 인권을 증진함과 동시에 현장 당사자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했다는 점에서 타당성 및 구체성 전반에서 긍정적임. ●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학폭 처리절차를 맡기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한 후보자의 구체적 기준 확인 필요. 	<p>적절한 공약이 다</p>
	<p>● 총평 설명: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 교권</p>		

	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음.		
7.사교육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불법적 운영 대책: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추진하고 과도한 교습비 단속 등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강화 ● 사교육 감소 방안: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사교육 경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한글과 숫자를 깨치기 시작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 학원휴일휴무제&학원교습시간: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도적 실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보이지 않음. 학원휴일휴무제의 경우는 불법 운영에 대한 대책은 아님. ● 사교육 감소 방안에 있어서도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 한글과 숫자 교육에 머물러 실질적인 사교육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학원휴일휴무제'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있음. ● 나머지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처가 자율적 규제 수준에 머무름. 	보통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 학원의 불법적 운영 대책과 사교육 감소 방안에서는 문제 인식은 좋으나, 개선방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없고, 있어도 구체성이 떨어짐. 		
8.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승진 제도: 양성과 임용의 비율을 3:1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 서울교원 공감힐링센터 기능 강화와 교원의 회복력 지원 프로그램 확대. 20년 근속교사 1년간 유급안식년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노력. ● 내부형 교장공모제: 내부형 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제도는 폐지되고 전문직성에 맞게 연구 수당 등으로 전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실효성이 없는 학부모 평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 교권침해 관련: 교육지원청별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스승의 날을 가칭 학교 화합의 날로 확대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은 타당한 지적이나 이를 어떻게 3:1로 맞추지 방안이 명확하지 않음. ● 사립학교 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없음. ●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 원론적 찬성을 보였고, 일반학교 확대에서도 찬성 입장을 보임. 다만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확대 방안이 없는 것은 아쉬움. ● 교원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 인식이 타당하고 학부모 평가에 대한 지적도 타당함. 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음. 교권 침해 관련해서는 개선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모두 떨어짐. 	보통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설명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참여 문제, 교원에 대한 다각적 지원 체제 수립 등의 문제 인식은 타당하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부족함. 		

<p>9.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교육 3.0 버전 질적 심화: 혁신학교 실험을 통해 검증된 제도와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일반 학교에 보급하는 혁신학교 일반화 추진 ●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시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정혁신 추진 ●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발전모델 수립: 민관학 거버넌스의 정책결정권과 예산결정권 강화, 자치구별 마을교육과정 개발과 학교 내 마을결합형교육 활성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학부모 우편 투표 등을 통해 직접 선출에 의한 구성, 학운위원의 실질적 논의 촉진을 위한 제반 정보와 자료 충실 제공, 학생 참여 보장 ● 학부모회 활동 공간 및 경비 지원. 학부모회의 교육과정 운영 역할 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와 지역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교육의 새로운 질적 심화의 방향으로 학교자치 확대를 설정한 것은 타당한 접근이라 할 수 있음. 단, 서울 혁신교육의 성과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한 객관적 평가 결과 제시 없이 질적 심화를 주장하는 것은 같은 실패와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 혁신학교의 신규 추가보다 혁신학교의 성공사례들을 일반학교에서 부분적,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통합지원센터'가 되어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으로서 타당함. ● 우편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도움은 되나 한계를 보일 수 있고,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의 주체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 부족함. 	<p>보통이다</p>
<p>10.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고와 자사고 대책: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중을 일반학교로 전환. 방식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 고입전형 개선: 전형시기 동일화 정책은 성적보통학생 선점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간 차이를 해소해야 함. ● 과학고와 영재고 대책: 과학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 개선. ● 일반고 개선방안: 단위학교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고와 자사고, 국제중을 일반학교로 전환한다는 명확한 방향 제시는 타당했으나, 구체적 방안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짐. ● 고입전형 개선에서도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천제 등이 빠진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있어서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문제점을 지 	<p>보통이다</p>
<p>● 총평 설명 : 혁신학교 질적 심화의 방향성이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지원청의 학교 통합지원 강화, 학생자치 확대로 설정된 것은 타당하고 구체적인 학교 구조 개혁 방안이라 할 수 있음.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구체적 전략이 부족함.</p>			

	<p>예산 운용 자율권 확대,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다양화</p>	<p>적하고 개선의지를 보였으나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 구체성이 제시되지 않음.</p> <p>● 일반고 개선방안은 개방-연합형 교육과정 운영 등 문제 인식과 방안이 타당함.</p>	
<p>11. 교육 환경 개선</p>	<p>● 서울은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필요성 있음. 전국시도교육감 협력하여 정부에 적극 제안</p> <p>● 5무(GMO, 방사능, 농약, 첨가물, 항생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에도 확대적용</p> <p>● '꿈을 담은 교실' 사업 확대 예정</p> <p>● 서울시와 협력하여 모든 학교의 화장실 시설 개선</p> <p>● 수업시간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그에 따른 연수지원 확대 등 교사지원 시스템 구축에 중점</p> <p>●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서 무선망확대, PC실 확보 등 인프라 확충</p> <p>● 독서문학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인성과 감성을 기르는 정책 개발 집중</p>	<p>●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황파악 및 문제의식이 부실하여 공약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p> <p>● 교원교육 연수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재정 마련 계획이 부족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음</p> <p>● 현직 교육감의 경험을 살려 3無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5無 무상급식을 확대 도입하겠다는 개혁성과 의지는 느껴짐. 또한, 사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다만, 3無 급식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5無 도입에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임.</p> <p>● 창의적인 학습환경을 위한 학교 개선 사업은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확보 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고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p>	<p>보통이다</p>
<p>12. 교육 행정 관료 주의 해</p>	<p>●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학교에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책 기능중심으로 전환시킴</p> <p>● 전문직 선발 시 현장근무실태평</p>	<p>● 현 교육감으로 4년간 교육행정 관료주의 해소 및 부패 방지에 대한 인상적인 실적이 보이지 않은 상태(청렴도 전체 17개 교육청 중 12위에 머뭇)에서 이번 공약에도</p>	<p>미흡한 공약이다</p>
<p>● 총평 설명 : 고교서열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타당하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며, 외고와 자사고, 국제중 일반학교 전환도 국가교육회의에 맡기는 모습임. 특히 고입전형 개선에서 그동안 후보가 교육감 시절 주장해왔던 '추첨'제 방식을 이번에 제시하지 않는 등 고입 전형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음.</p> <p>● 총평 설명: 현직 교육감의 경험을 살려 급식실 개선과 학교 시설 개선 등 현장의 상황을 잘 반영했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은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소극적 태도에 그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마련 방안 등 구체성이 부족함.</p>			

소 와 부 패 방지	<p>가 및 논술 심층면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정책사업 총량제 실시 ● 교육청 목적사업 및 국가시책사업 일괄 안내 및 신청제, 본청 세세부사업 등 기준사업 정비, 정책평가단 운영, '외부 공문 관리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한 교육청 내외부 공문 감축 강화 ● 학교업무 정상화 정책의 현장 모니터링 지속 ● 서울교육청 청렴도 향상정책: 청탁금지법 정착, 5대 청렴문화 캠페인,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평가, 퇴직공직자와 부당한 알선 청탁 목적의 사적 접촉 제한,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p>그 의지가 크게 드러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인 교육전문기관으로서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행정 등은 올바른 방향임. ● 전문직 선발 시 현장근무실태평가 및 논술 심층면접 강화를 통해 전문직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직과 승진의 연결 고리 차단에 대한 대안적 공약, 일반직 행정 관행 개선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음. ● 서울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약은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12위의 청렴도를 끌어올릴 비상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사학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언급 또한 없음. 관련 공약이 공약공보집에는 있지만 추진 의지가 약해 보임. 	
	<p>● 총평 설명 : 현재 서울교육청 청렴지수 하위권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서울교육청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책 공약이 부족함.</p>		

■ 후보별 평가 3 : 박선영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총평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영역은 없었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 **미흡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래 해설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박선영 후보 공약 평가 결과>

영역	주요 공약	분석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1.영유아 고통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등 외국어 수업의 학교장 자율선택 ● 유·초·중·고와 대학간 협력을 위한 '미래서울교육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조기교육 및 사교육에 관한 문제의식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고려할 때 해당 공약 타당성 낮음 ● 유·초·중·고·대학 간 입시 제도 및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문제의식 일면 일리 있으나, '미래서울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위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미흡한 공약이다
2.졸 세우 기 관 행 해 결	(없음)	(없음)	없음
3.수업 과 평 가 혁 신	(없음)	(없음)	없음
4.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취업학생 취업비용 제로 체제 도입: 취업지원 one-stop 포털사이트 'my Job Pass' 구축 ● 서울형 최첨단 특수학교 설립과 AI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취업 지원 정책을 제시함 특성화고 지원율 하락을 막을 구체적 방안은 없음 ● 최첨단 특수학교 설립과 AI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시스템의 구체적 청사진이나 예산확보방안 미흡. 	미흡한 공약이다
5.책임 교육 과 교육 기회 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최하위 서울교육의 최상위 학력신장 방안마련(기초학력보장법 제정) ● 초, 중, 고 학생대상 학력평가 실시 ● 학교장 책임제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자율 실시. 초등학교 1,2년 영어 등 외국어 수업의 학교장 자율선택 ● 유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초·중고 학생 대상의 학력평가를 치루는 방식은 여러 해 전 실패한 정책이며 기초학력보장법 취지상 최상위 학력신장 방안과 조화될 수 없음. ●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은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선행교육금지법에 위배되는 공약임. ●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제시하 	미흡한 공약이다

	<p>교육 전면 확대 - 초중고 유희학 교시설을 이용, 24시 맞춤형 돌봄 교육 전면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방과후학교 교육공사(일명 서울AS공사) 설립 ● 도심 속 24시간학교 설립: 학생 없는 폐교위기 학교시설을 '도심 속 24시간학교'로 운영 ● 굿모닝 교실 운영 ● 방과후학교 전담 교장제 도입 ● 방과후 '드림 교실' 운영: 방과후 학교 '드림교실' 책임 담당제 운영 <p>- 학생에게는 꿈(Dream)을 제공</p>	<p>고, 서울형 방과후학교 교육공사(서울AS공사)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서울AS공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p> <p>총평 설명 : 돌봄확대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학교 정규교육과정 부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이 없고,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과거와 같은 학력평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학습부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음.</p>	
<p>6.학생 안전과 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성폭력, 폭력 치료전담 '새빛학교' 운영 ● 학교폭력, 생활지도, 안전지도 전담하는 교육청 직속의 스쿨폴리스제 도입 ●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돕는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 학교폭력 업무처리를 위해 폭력전담 변호사 지원체제 확대 ● 학생 건강 검진을 강화하고, 서울의사협회와 MOU 통해 체계적 지원 ●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동성애 조장 등) 삭제 및 전면 개편 ●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 보완,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강화 3대법안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빛학교', 교육청 직속의 스쿨폴리스제,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폭력 전담 변호사 지원 체제 확대 등 학교 폭력 관련 공약 등에서 후보자의 공약 구체성 있음. ●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해결 관련 고충 및 갈등에 관한 후보자의 문제의식 및 고충 확인하기 어려움. ● 안전 및 학생 인권 관련 공약 확인하기 어려움 	<p>보통이다</p>
<p>7.사교육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교육 규제법 관련: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등 외국어 수업의 학교장 자율선택 ● 학원 불법적 운영 대책: 없음 ● 사교육 감소 방안: 서울형 방과후학교 교육공사 설립. 학생 맞춤형 AI 교육지원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의 학교장 자율선택은 국가교육과정과 선행교육금지법을 학교장이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교육지원은 타당한 정책이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음. 	<p>미흡한 공약이다</p>
<p>8.교원 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원 양성-임용-연수-승진 제도: 교사 유급 연구학기 운영(7년 경력 후). 대학원 등록금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유급 연구학기는 의미 있으나 모든 후보가 제시하여 특별하지 않음. 	<p>미흡한 공약이다</p>

성과 책 무 성 향상	지원 ● 내부형 교장공모제 축소 ● 교권침해 관련: 교권강화 3대 법안: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교조의 놀이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육감 후보로서 편협한 시각이라 판단됨. 교권강화 3대 법안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9.참여 와 소 통 을 위 한 학 교 구 조 개혁	● 혁신학교 폐지, 일반학교 예산지원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 융복합중고등학교 전환 :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 IT, AI 분야의 '융복합 중고등학교' 신설하고,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살려 진로분야를 특화시킨 미래형 학교 신설 학부모 '교육기부' 활성화	● 혁신학교가 기존의 교육개혁이 보여주지 못한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준 혁신학교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혁신학교 폐지를 주장한 것은 단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추진될 경우 우려와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음. 혁신학교가 문제라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그에 상응할만한 대책이 있어야하는데, 그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음.	미흡한 공약이 다
10.다 양 성 과 평 등 성 을 확 보 하 는 고 교 체 제	● 외고와 자사고 현행 유지 ● 고입전형 개선: 서울 전 지역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한 학교 선택권 보장	● 학교 선택권만 보장하고 배정 방식을 밝히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심각하게 문제 됨. ● 심각한 고교서열화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음.	미흡한 공약이 다
11.교 육 환 경 개선	● 최첨단 학교시설 '신뉴딜 학교개선사업'(화장실, 도서관, 급식실 선진국형 추진) ● 서울형 최첨단 특수학교 설립과 AI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방지 최첨단 공조시스템,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 학교 석면, 드라이비트 시설 교체 등 각종위험 시설 개선 ● 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또는 구청단위로 또한, 4년간의 정책 실행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 식자재 공동구매, 공동조리로 안전제고와 급식 질 향상	●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함.	보통이 다

12. 교육 정책 관주해와 부패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본청)과 교육지원정보청으로 행정효율화 추진 ● 서울교육개발원 신설: 서울교육개발원 신설을 통해 '서울미래교육비전'(2030) 마련 ● 서울교육청 예산지원체계 전면 개편: 효율적 서울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을 위해 블록체인기반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효율화 추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 정보 공개 등 투명성 강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부패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 역시 언급 없음. 	미흡한 공약이다
-----------------------------	--	---	----------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7.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공동운영위원장: 송인수, 윤지희(문의: 김태훈 운영팀장 02-797-4044, esemane@hanmail.net)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전화: 02-797-4044, 팩스: 797-4484